

허술한 검경수사권 조정...선거법 재판 발목 잡았다

정준호 의원 측 "수사 개시 검사와 공소 제기 검사 동일해 기소 위법" 재판부 받아들여 변론 종결...다음달 14일 공소 기각 여부 판단 방침 검찰 "선관위 고발 사건 기소 가능...절차적 하자 보완해 재기소할 것"

검·경수사권 조정의 '틈새'가 현직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재판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 논란에 이어 '동일한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적법한지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재판을 지난 17일 변론종결했다.

재판부는 정 의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월과 2월로 예정된 3차례 증인신문 기일을 모두

정지하고 다음달 14일 공소기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수사개시 검사와 공소제기 검사가 A검사로 동일해 기소자체가 위법"이라면서 "명백한 공소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의원에게 불법전화방 운영 혐의가 있다고 고발함에 따라 A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했다.

정 의원측 변호인은 현행 검찰청법(4조 2항)은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위반했다

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2022년 5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됐다.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대상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범죄' 등 소위 '6대 범죄'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2대 범죄'로 축소한 것이다. 선거범죄의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대검은 당시 검사가 피 혐의자의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 등 5가지 유형의 수사 행위에 참여한 경우 '직접 수사 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또 수사 과정에 참여한 검사는 사실상 기소를 못하는 내용으로 예규를 제정했다.

하지만, 광주지검은 같은 법의 단서조항을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송치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정 의원 측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사법경찰관이 없어 송치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판박하고 있다.

검찰은 정 의원 측에 소송의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광주지검은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 절차 규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즉시 재기소 가능하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253조)상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원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경우 기소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돼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이를 수정해 즉시 재기

소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용해 공소기각 판결이 나와도 소송에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기각은 소송경제에 낭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법 개정이 지속 진행되면서 난맥상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재판지연만 초래할 뿐 검·경수사권 조정은 실효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500만원을 제공해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2명에게는 4만여건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재판을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유권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벌금이 당선무효 효력이 발생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직위를 유지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지난 3월 4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권리당원인 사실을 숨기고 시민 자격으로도 투표하라는 일명 '이중 투표'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선거구민을 만나 질문에 대답하다 무의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면서 "이중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 것만 뿐 지지를 호소하지는

않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더 엄격히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유세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선거전 범행이 공개됐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선택했다"면서 "나아가 주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기 때문에 정당정치와 선거의 이념,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피고인의 당선을 무효화시킬 형은 선고하지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법정에서 나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혼란한 정세 속에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 잘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尹정권 즉각 퇴진하라" 윤석열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11차 광주시민총결기대회에서 분수대 주변을 돌며 깃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마약 투약 후 "살려 달라" 경찰 자진 신고 20대 구속

누번기간 중 마약을 투약한 뒤 경찰에 자진 신고한 남성이 절창신세를 지게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5시에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모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 투약 후 경찰에 전화해 "살려 달라"고 스스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간이 시약 검사 결과 A씨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던지기 수법을 통해 마약을 입수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전과로 수감됐다 출소해 누번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구속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도심 편의점 강도 행각 1시간 30분만에 40대 검거

광주 도심의 편의점에서 강도 행각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A(49)씨를 강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에서 재고 정리 작업을 하던 종업원 B(여·53)씨를 폭행하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해당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뒤, 다시 돌아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가 "현금이 필요한 거냐"며 카운터에서 현금을 꺼내 주자 A씨는 돈을 챙겨 달아났다.

A씨는 범행 1시간 30여분만에 범행 현장에서 500여m 떨어진 PC방에서 검거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尹 구속 인과응보" 철저한 조사·처벌 촉구

오월단체·광주 시민사회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자 5·18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인과응보"라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5·18민주화운동 공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헌법과 국권을 유린한 자의 구속은 당연한 결과이며, 내란 행위의 종식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 대통령의 구속은 정의와 법치의 승리를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19일 새벽

사법부에 난입해 폭동과 소요를 일으키며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사태는 내란 행위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무도한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국가의 안정을 위협하는 선동을 멈춰야 하며, 윤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더 이상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단호히 수호하기 위해 이반 폭동을 주도하고 참여한 자들, 배후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도 "윤 대통령이 파면되

고 내란세력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광주 시민과 함께 광장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광주비상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은 사법귀정이다"며 "12·3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은 한 달 반 동안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피, 재범우려를 차고 넘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광주비상행동은 또 "철지난 냉전 이념과 망상에 사로잡혀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윤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 뿐"이라며 "다시는 불법 내란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윤 대통령과 내란 주동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분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